

월/요/광/장

강희숙



정확한 달 전, 차기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에 “안창호 씨”라고 답했다가 또 다른 후보 진영으로부터 호되게 비판을 당한 적이 있다. 전 국민이 추앙하는 민족 지도자를 ‘선생’이 아닌 ‘씨’로 호칭한 대통령 후보의 역사적 부재를 다시 문제 삼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때 나온 말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천박하고 뒤떨린 대통령 후보의 개조론”이었던 바, 이는 민족 독립의 방법론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었던 도산의 ‘민족개조론’을 원용한 것임은 물론이다.

이제는 지난 시간의 참고 안에 고이 간직해도 좋을 ‘민족개조론’을 오늘 또 다시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근에 이루어진 한 여론조사의 결과 때문이다. 얼마 전, ‘사람인’이라는 이름의 한 취업 사이트에서는 직장인 1천62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되십니까?’라는 설문문을 실시한 결과, 무려 88.1%가 ‘그렇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직장인 10명 중 9명으로 하여금 국가의

내일을 낙관할 수 없도록 만든 주된 요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첫 번째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 (39.1%), 두 번째가 ‘이기주의의 팽배’ (17.5%)였다. 놀라운 것은 도산의 ‘민족

정치 현실과 ‘신 민족개조론’

개조론’에서 제기된 국권 상실의 주요인이 어떤 여론조사의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를 절망이라는 이름의, 결코 치유가 쉽지 않은 병에 걸리도록 몰아넣었던 첫 번째 요인이 고위 공무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부정부패요, 비리라고 하는 사실은, 이것이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신문의 지면을 도배하다시피하고 있는 뉴스들, 누구보다도 원칙과 청렴을 중시했어야 할 고위직 인사들이 뇌물수수나 직권남용 등 권력형 비리의 온상이었음을 거듭 확인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닐까?’하는 우려와 좌절에 빠지도록 만든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두 번째 요인, 곧 균형적인 사회 발전에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때문에 권력형 비리 못지 않은 심각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나’와 ‘우리 가족’만을 앞세웠고, 혈연과 지연, 학연 등에 얽매이는 집단이기주의

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만, 그리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집단이기주의는 국가의 균형발전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과 상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뒷마당은 안 돼” 식의 남비 현상의 주역이 되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의식을 끈질기게 사로잡고 있는 고질적인 지역감정 역시도 집단이기주의의 또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당면해 있는 가장 큰 과제, 곧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중차대한 일에 있어서도 대통령 후보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본보다는 어느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가가 더 큰 강점 혹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

그렇다고 희망은 정녕 없는 것일까?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도산의 ‘민족개조론’을 꼼꼼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대로, 도산의 ‘민족개조론’은 우리 민족의 지력에 대한 철저한 신뢰의 바탕에서 나온 자기비판이다. 그는 우리 민족성을 결코 고착화된 성격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사실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하다. 비리 공무원이 설 땅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철저한 윤리의식, 집단이기주의를 넘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제대로 키우기만 한다면, 기적적인 경제성장에 걸맞은 정치인과 의식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민족개조론’ 운운이 시대착오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능력, 변화와 개혁의 주창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희망을 걸어도 좋을리라 본다.

〈조선대 국문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끝내 강행할 건가

전남지역 일부 지방의회가 내년도의 의정비를 대폭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를 올해 연 3천960만원에서 4천748만원으로 19.9%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전남지역 기초의회는 더욱 가관이다. 여수시의회는 현재의 2천740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무려 75.2%나 올릴 계획이다. 광양시의회도 2천880만원에서 45.8% 오른 4천2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전남지역 일부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폭은 너무 지나치다.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은 재정지출도와 재정지수가 가이드라인이다. 전남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출도는 전국 최하위권이다. 상당수 자치단체는 자체 재정수입으로는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지수가 열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비를 두 자리 수 이상 대폭 인상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없을 뿐 아니라 염치를 모르는 후안무

치(厚顔無恥)한 행동이다. 빚더미 살림에 초호화 승용차를 타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먼저 챙겨야 할 지방의원들의 행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려면 합리적 기준이나 명분을 제시해야 한다. ‘다 지방의회 의정비에 비해 너무 적으니깐’, ‘부담재정 정도 대우는 받아야 하기 때문’에’와 같은 막연한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지방의원은 겸직 금지 조항이 없어 대부분의 의원들은 의원직 외에 다른 생계수단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극히 부정적이다. 의정비를 대폭 인상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주민정서와 상식에 맞지 않은 의정비 인상은 재고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먼 직접 주민이 나서 저지하는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들은 의정비 인상보다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사하는 책무에 보다 충실해야 할 것이다.

주유소 ‘눈 속임 가격관’ 철저히 단속하라

유가가 치솟으면서 광주 시내 일부 주유소에 ‘눈 속임 가격관’이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할인가격을 정사가격처럼 꾸민 표시판을 세워두고 운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할인가격을 받고 찾은 운전자들은 주유소의 사기행각에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서민들은 유가 급등으로 살림살이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천600원을 넘어선 지 오래됐고 경유도 리터당 1천400원을 넘어가는 추세다. 자영업자 등 서민들은 폭락한 경유가 아니면 자동차 운행할 자제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름값에 한숨을 짓고 있는 것이다.

‘눈 속임 가격관’은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다. 주유소들은 경쟁적으로 할인가격을 큰 글씨로, 정사가격은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 할인가격과 정사가격의 차이가 리터당 55원을 달하고 있다고 하니 여자가 없다.

할인가격을 정사가격처럼 속이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할인가를 위로 올리거나 정사가격인 것처럼 표시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가진 시·군·구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 실적은 거의 없다. 광주 지역 주유소는 293개소에 달하지만 5개 구청이 가격표시 위반 등으로 단속한 건수는 지난해 2건, 올해 1건에 불과하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주유소의 ‘눈 속임 가격관’은 기름값이 오를수록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틀림없다. 행정기관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하지만 ‘말 잔치’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허위 가격표시판에 속은 소비자들의 낭패감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無等鼓

워싱턴의 명소인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에서는 케네디 대통령의 역사적 연설 장면을 비디오로 보여주고 있다. 우주 경쟁에서 소련에 계속 밀리던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가 1961년 5월 25일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60년대 안에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고 공언했던 바로 그 장면이다.

케네디 밑에서 부통령을 지낸 린든 존슨은 1957년 10월 4일 자신의 텍사스 목장에서 소련이 만든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존슨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것은 지금부터 우주다”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떠올렸다고 회고했다. 이후 존슨은 케네디를 설득해 달 착륙 계획을 세우게 했다. 휴스턴에 있는 ‘존슨우주센터’는 존슨의 공로를 기려 붙여진 이름이다.

우주개발이 과학의 영역을 넘어 국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바로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로부터 시작했다.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소련과의

사이에 우주 레이스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굳이 다른 나라에 앞서지 않으면 안될 이유는 나는 전혀 모르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우주경쟁에서 뒤진 미국의 쇼크는 생각보다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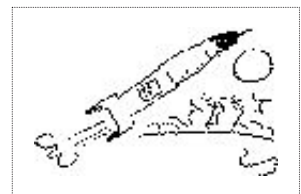
결국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케네디의 공언은 실현됐지만 50~60년대 미국과 소련간의 우주 경쟁은 국력의 시험장이었다.

중국이 지난 24일 달 탐사 위성 ‘창어(嫦娥) 1호’ 발사에 성공했다. 후진타오 주석 등 중국의 지도부는 발사 현장인 스촨(四川)성 시창(西昌)에 총집결, ‘위대한 중화 부흥의 자부심’을 만끽했다.

중국뿐 아니다. 인도도 내년 4월 달 탐사 위성 ‘찬다라얀 1호’를, 일본은 2010년까지 달 표면에 착륙해 탐사활동을 벌이는 ‘셀레네 2호’를 발사할 예정이다. 바야흐로 아시아 강대국간에 과거 미·소간에 벌어졌던 우주전쟁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오승중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창어(嫦娥) 1호



특별기고

노진영



2012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11월 27일)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국민 모두가 여수 유치 성공을 염원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반드시 이뤄지리라는 것을 믿고 싶다.

5년전 인구 1천700만의 거대도시 중국 상하이와의 유치 경쟁에서 4차 결선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싸움 끝에 아깝게 패한 바 있다. 그 실패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외교력, 개최 도시의 인지도 및 인프라·관련 조직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가 상하이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여수 개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도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 주도로 외국으로 나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직접 나서 최선을 다해 뛰어들었다. 세계적인 조직을 갖춘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 BIE 현지 실사에서 ‘훌륭하다(excellent)’는 평가를 받았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국민들이 환영함으로써 실사단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범국가차원 총력전 피야

이제 한 달이 남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지금까지 성과를 확고하게 다지고 부동산 가격이 많은 유럽 지역과 친모로코 성향

그러나 우리는 패배의 좌절감을 이겨내고 다시금 힘을 모아 유치 성공을 위해 숨 가쁘게 뛰어왔다.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중앙, 도, 여수시가 역할을 분담하여 유치

여수엑스포 유치, 남은 한 달에 달렸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왔다. 당시에 지적된 도로나 교통망 등 부족한 사회간접 시설도 전남도가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2004년 말 국가계획이 확정되어 지금까지 2조 2천억 원을 확보하고 전주~광양 고속도로, 목포~광양 고속도로, 순천~여수 철도 개량사업 등 대규모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라고 볼 수 있는 아프리카·중동 지역에 접근하는 면밀한 전략이 필요한 때다.

최근 모로코는 신규 회원국 가입을 추진하고 국적이 중심이 되어 감성 외교를 활발히 펼치고 있다. 유럽 지역의 회원국들 가운데서는 아직 지지할 곳을 정하지 않은 나라가 많다고 한다. 세밀하게 표의 향방을 분석하여 1%의 지지 가능성이 있다고 있다면 가만히 있지 말아야 한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대기업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로서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그야말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한 달 후에 축배의 잔을 높이 들 수 있도록 우리 온 국민은 한마음이 되어 열정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1월 27 새벽 우리 모두 함께 “여수 코리아”를 소리 높여 외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빈다.

〈2012년 세계박람회 지방유치위원장〉

혼신 다한 유치 노력

또한 전남도와 지방유치위원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이벤트를 열고 대규모 축제나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여수엑스포를 알렸다. 또 언론과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수가 엑스포를 개최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렸다.

유치 활동은 외국을 향해서도 적극적으로 벌였다. 여수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주한외교사절·외신기자·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들을 초청해

법조 칼럼

최정재



사법고시 합격생 1천명 시대에 변호사를 시작한 사람들은 법조인으로서의 기득권이 무엇인지조차 느껴보지도 못한 채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버려졌다.

지금은 사법개혁, 시장논리에 입각한 국민의 법률서비스 질적 향상 등의 명분을 내세워 기득권을 내놓으라는 사회 각계의 압박을 받아 대한변협 등 변호사 단체는 사실상 무장 해제된 상태다. 사실 이미 변호사들의 밥그릇은 작아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계속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돌파할 것인지 고민한 끝에 지금까지 변호사들이 손을 대지 않았던 분야로의 직역을 확장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직역 확장은 피할 수 없는 길

〈職域〉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법률서비스의 양과 질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히 법조인 수가 많아지면 국민의 법률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는 생각은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부작용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이다.

변호사 직역의 확장은 수직적·수평적·시기적 확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수직적 확장은 돈이 없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사람·형량이 적어·소액이어서 기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사건들을 위해 국가적·사회적 방안을 모색,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이 같은 노력이 법률구조·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름다운 재단 등 사회적인 차원에서 시도돼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가고 있지만, 이는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평적 확장은 변호사들이 사회 각 분야, 즉 각 정부기관·기업·사회단체에 침투해 법률고문·자문 역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야에서도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왔지만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채용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얻을 수 있는 수익성을 비교해 수익성이 클 때 가능하다. 따라서 그 적당한 해결점을 찾는 것이 문제다.

기존에 사회의 법률적 분쟁 및 법률 관련 업무를 변호사는 물론 법무사·노무사·세무사·변리사·공인중개사가 나눠 맡아 왔다. 이런 분야까지 변호사들이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는 것

으로 보인다. 이 경우 법조 유사직역의 반발로 인해 쉽지 않은 일겠지만, 앞으로 대체는 법조 유사직역까지 변호사가 침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된다.

시기적 확장은 지금까지 변호사는 법률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뒤처리를 담당해 왔다. 앞으로는 계약서 체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들이 개입해 차후 발생할 문제를 미리 방지하는 것도 맡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담당했던 각종 인·허가와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참여,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고소대리 등의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사법고시제도가 로스쿨제도로 변경되면서 더욱 많은 변호사가 매년 쏟아져 나올 것이다. 많은 변호사는 앞으로 어떻게 사무실 수익성을 유지할 것인지 많은 고민 중에 있다. 하지만, 보다 시야를 넓고 현명한 판단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변호사〉

황혼 이혼 증증...지자체 예방책 세우야

‘황혼 이혼’이란 신조어가 들어온 지 10여년, 이제 특별한 계층에서만 사용되는 용어가 아닐 정도로 노년층의 이혼이 늘고 있다.

왜 인생 말년에 이혼이라는 방법을 택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노년기 이혼은 젊은 부부의 총동거 이혼과 달리 오랜 세월동안 쌓인 불신과 분노가

결국은 터져나온 것이다. 겉으로야 가정을 유지해 왔지만 그것은 자라나는 아이들, 결혼을 해야 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그냥 참아온 경우가 많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자치단체에서는 이제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노년기 황혼 이혼 예방을 위해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김덕용·광주시 북구 옹무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평론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대표전화 2200-500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시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7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